

민주노동당 지지단체 2차 간담회 열어

노동과세계 | 승인 2008.02.18 10:06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만들었다, 모든 의견그룹들이 참여하는 통합 비대위 구성하고, 당 강화위해 민주노동당 지지단체들은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노동당이 분당 내홍 속에서 강도 높은 혁신책 등을 수립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분당은 공멸이라는 인식아래 민주노동당 지지단체들이 거듭 단결혁신을 외치며 간담회를 벌이고 있다.

당 지지단체들인 민주노총과 전농, 전여농, 한청 등은 지난 14일 1차 간담회에 이어 이날(18일) 아침 8시 민주노동당 4층 브리핑실에서 지지단체와 당 비대위가 2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19일 민주노동당 중앙위 개최를 앞두고 열리는 지지단체 간담회로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 상태다.

민주노동당은 19일 오후 6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중앙위를 개최한다. 이번 중앙위에는 ▲민주노동당 혁신 비상대책위 구성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 추진 결의 ▲제18대 총선방침과 비례대표 후보 선출 ▲동시당직공직선서 일정 확정 ▲선거관리 규정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준 ▲재정위기 대책과 상반기 예산 승인 ▲중앙위원회 특별결의문 채택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각 안건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당 혁신 비상대책위 구성을 중앙위 1호 안건으로 제출했다. 당은 지난 3일 대대파행으로 심상정 비대위가 총사퇴하고 천영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에 따라 당은 당면한 오는 4월 9일 총선에 대응하는 한편 혁신 및 재창당 준비를 위해 현재의 직무대행 체계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방향으로 전환해 차기 지도부 선출시까지 지도부 임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식명칭은 '민주노동당 혁신 비상대책위'가 될 전망이다.

그밖에 당면 위기 수습방안으로써 "사실상의 탈당 선언을 하고도 당직을 유지한 채 당 와해 노력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부도덕하고 당 정상화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규정하고 탈당당사를 밝힌 당직자에 대해 당직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당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또 지역위 해산을 결의하거나 주요 당직자가 탈당한 경우 지역조직별 비대위 구성과 함께 중앙당 및 시도당 직접 관할 방식으로 당 조직을 정상화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같은 문제들 해결을 위해 비대위를 꾸려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건 2호로 제출된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 추진 결의와 관련해 일단 사업 추진 조직 명칭을 '혁신-재창당 준비위원회'로 하고 여기서 혁신 및 재창당 과제 도출 및 방안 마련, 의견수렴 방안 기획, 총선 기획 등을 추진한다. 준비위는 오는 2월말 구성될 예정이고 오는 3월중 혁신-재창당을 위한 세부과제 및 목표 발표와 함께 총선전후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전당적 토론 등을 주도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제18대 총선방침과 비례대표 후보 선출방안인데 당은 총선투쟁 기조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약육강식의 시장주의에 맞서 서민경제와 사회공공성을 수호할 강력한 진보야당으로 거듭 난다"는 기조를 정하고 "이번 총선을 통해 무능한 국정 실패 세력을 대체하는 중심야당-대표야당으로 자리잡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당은 당헌당규에 입각해 오는 3월초까지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 지지단체 2차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 대표자들은 일단 국민들 앞에 참신한 당 혁신안 등을 마련해 제출한다는 입장과 함께 오는 19일 민주노동당 중앙위를 성사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 당 비대위 등을 꾸리는 등 당 혁신 및 재창당, 총선 대응 등과 관련한 본격 행보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월 14일 현재 민주노동당 8만 당원중 분당을 위해 탈당을 표시한 이들은 극히 적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탈당론 자체에 대해 극히 회의적인 견해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분당위기로 증폭에 대해 이날 지지단체들은 "일부 언론들이 과도하게 민주노동당 탈당, 분당을 획책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다"며 "지지단체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민주노동당 강화를 위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천명

했다.

간담회에서 이병렬 민주노동당 노동위원장은 “사실 현장에서 가서 국민들 의견을 청취해보면 대다수가 민주노동당이 어려운 때 당을 깨고 나가는 처사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며 현장 민심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이영희 총연맹 정치위원장은 “울산 등을 비롯한 노동현장에 다녔는데 현장 조합원들은 일부 당 간부들의 패권적 분당 행위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말로 현장 조합원들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미에프티이에이 저지 미국 원정투쟁을 마치고 지난 16일 귀국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총연맹 산하 조직 중 소수 연맹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방침 철회와 민주노동당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총연맹은 이미 대대 등을 통해 당 지지방침과 당을 통한 노동자 정세력화 방침을 거듭 결의한 바 있고, 따라서 이후 총연맹 대대 개최 등을 통해 이런 부분을 재확인하고 당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타적 지지’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총연맹이 과거에 대대 결의를 통해 민주노동당을 만들었고,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당 강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당 위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혁신책을 국민들 앞에 내놓으려면 이번 중앙위를 통해 탈당선언자들을 조기 처리하는 한편, 비대위 구성의 경우 당내 다양한 의견그룹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중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지지단체 2차 간담회에는 민주노동당에서 천영세 의원(대표 직무대행), 최순영 의원(집행위원장), 이영순 의원(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지지단체에서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식 총연맹 사무총장, 이영희 총연맹 정치위원장,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덕윤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